

文 대통령, 개헌안 발의... '공'은 국회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38년만에 대통령 개헌안 여야 3당 개헌 협상 합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개헌안은 문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거쳐 오후 국회로 송부되고 곧장 관보에 게재돼 발의 절차가 완료됐다. 그동안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야 3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 절차를 거쳐 국회로 넘어오자 전격적으로 개헌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

환 전 대통령이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대통령은 개헌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5월 24일까지) 심의를 거쳐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을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를 생각이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

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원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 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의 핵심은 권력구조는 4년 1차 연임제이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집중을 따른 비판을 감안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 대통령 권한을 상당 부분 분산·축소했다.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한편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할 수 있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수도 조항 삽입, 토지공개념 조항 명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지방분권 국가 지방 분구 등도 추가됐다. 하지만 '국무총리 국회 선출', 또는 '국가 추천'을 요구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본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했다. 김정태 기자 kmjh2001@

정부, 청년 일자리 해결 "모든 수단 총동원"

4대 분야 중점추진 과제 발표 "실질적 효과 내겠다" 청년실업률 8% 이하 안정·최대 22만명 추가 고용창출

정부가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안정시키고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창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

화 등의 '4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고용 증대 기업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과 소득세 면제 등 청년들의 목돈 마련 제도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금과 사업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기업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등 기술력과 혁신성

을 가진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개방형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및 사회적 경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 등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한다. 취업·창업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해 선취업·후학습 '일학습병행제'를 만들고 혁신성장 선도사업 등 지역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형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 취업 창업을 연계한다. 한편 산업·교육·노동시장 등 구조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적 대응 예시, 정책브리핑 제공

대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한 주력산업 혁신성장 방안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효선 기자 geschafft.a@

소년보다 노인 많아져 '고령화 심각'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 전남 가장 높고 세종 낮아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과거 노인인구가 적은 반면 유소년 인구가 많은 삼각형 모양에서 이제는 마름모꼴로 인구 구조로 바뀌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45만명으로 전년 대비 0.39% 증가했다. 통계청은 2032년 이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하고 2060년에는 인구성장률이 -0.97%에 이를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이미 2014년(40.3세) 40세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2.0세를 기록했다. 2033년이 되면 50.3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3.8%(707만6000명)로 15세 미만 유소년인구(13.1% 675만1000명) 보다 높았다.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능가한 것은 처음이다. 고령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눠 100을 곱한 노령화지수는 104.8명이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전북(18.5%)과 경북(18.4%)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인구 다섯에 하나는 노인이라는 뜻이다.

반면 세종(9.2%)과 울산(9.6%)은 고령인구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73.1%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통계청은 2060년이 되면 노령화지수가 434.6명, 노년부양비가 82.6명으로 현재보다 4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여가 활용에 만족하는 이들의 비율은 27.2%로 2년 전보다 1.2% 포인트 높아졌고 불만족이라는 반응은 26.2%로 1.1% 포인트 상승했다.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지목한 이들이 5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간부족(24.4%), 체력이나 건강 상태 불량(10.4%) 등이 꼽혔다.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에 대한 인식은 전년보다 0.1점 상승했다. 반면 걱정(근심), 우울감에 대한 인식은 전년보다 각각 0.2점, 0.1점 감소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은 50대와 60대에서 낮았다. 걱정(근심)과 우울감은 10~20대와 40대에서 높았다. 김수진 기자 neunga@

공무원 증진계 감경 까다로워져

소청심사 과반→3분의2로 강화 위법·부당 인사, 누구든 제보 가능

앞으로는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증진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또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에 대해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징계, 소청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소청심사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

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사신문고'에서 받았던 위법·부당한 인사행위에 대한 신고체계가 법적 근거와 제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 거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공직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추가로 발굴·수집하고 인사상 목적 외 정책 자문 등의 목적으로도 인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영재 기자 jae-63@

지면 안내		
청약서 분실·경위서 허위 기재 보행사, 유가족과 분쟁 논란	2면	함평군 서울농장사업 무산 놓고 책임 공방
4인 선거구제, 무엇이 논란인가	3면	라이프·도심속 자연을 그리는 삶
		7면
		10면

용평은 국가대표다!

PRIDE | 용평

1975년 국내 최초 스키장.
국내 최대 520만평 리조트.
국내 최장 25.5Km 슬로프.
국내 최다 50회 국제스키대회...
대한민국 스키의 기록을 만들어 갑니다.

ALL SEASONS RESORT
용평리조트